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발행일 2017. 11. 20.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19개 정부기관, 64개 사업 중 34개 사업

특수활동비 불필요

특수활동비 예산 더 줄여야

목차

목차	2
요약	3
문제제기 및 조사취지	4
1. 특수활동비 문제사례 및 축소 흐름	4
2. 조사취지	5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	6
1. 19개 정부기관의 연도별, 기관별 특수활동비 예산 추이	6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된 개별사업 분석	9
1. 19개 정부기관 사업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적정성 평가	9
2.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기획·편성한 정보예산으로 확인된 경우	23
결론	26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8.7% 축소

그러나 부적정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여전히 많음

- 법무부 간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간의 소위 ‘돈봉투 만찬’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는 것과 더불어 주요 정부기관에서도 수차례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2018년도 정부예산안을 살펴보면,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전년도 대비 전체 18.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국가정보원은 예산 정보가 비공개¹되므로 이 보고서의 점검대상 기관에서는 제외함.
- 2018년도 예산안의 개별사업을 분석해본 결과,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64개(3216억 4600만원) 중 34개 사업(294억 800만원)은 특수활동비의 적용대상인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관의 기본운영,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국정운영 지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 외교활동과 국제회의, 경호, 국가송무수행, 공소유지, 교정활동 지원 등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조사 및 수사활동과는 거리가 먼 사업에 특수활동비가 다수 편성됨.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 더 줄여야

- 특수활동비는 타 비목의 예산과 비교해 관리·감독 방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예산의 사적 유용, 목적 외 사용 등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참여연대가 지난 6월부터 진행한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특수활동비 자체감사/증빙제출 현황>에서도 특수활동비의 내부통제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 기밀성을 요하는 정보수집 및 수사활동과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의 불필요한 편성을 최소화해야 함.

¹ <국가정보원법> 제12조(예산회계)

②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각 정부기관의 예산으로 편성되지만 국가정보원이 기획·편성하는 예산도 투명성, 관리·감독 상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집행처를 명확히 해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문제제기 및 조사취지

1. 특수활동비 문제사례 및 축소 흐름

- 올해 4월 법무부 검찰국 간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간의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오간 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밝혀지면서 특수활동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올 10월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 상납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킴².
지난 2015년에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국회대책비를 유용한 사실과 신계륜 전 국회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 직책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³이 밝혀져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특수활동비는 매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적용범위가 결정되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사용하면서도 그 지급일자와 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이 기재된 집행내용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특수활동비 지급(현금지급) 및 집행(서류제출 생략)의 특성을 악용해 특수활동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본래의 목적 외 용도로 지출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해옴.
- 이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 강화와 더불어 이미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예산의 상당 금액을 통제가 더 용이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타 비목(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옴. 그에 따라 몇몇 정부기관에서도 2018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청와대는 지난 5월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올해 대비 31%(50억원) 축소한 금액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⁴.

² 매일경제(2017.10.31), <“국정원, 매년 박근혜 靑에 특활비 상납”>

³ 서울신문(2015.5.12.), <洪 “국회 대책비 중 일부 모은 돈”... 野 “명백한 공금 횡령”>

KBS(2015.5.19), <신계륜 의원 “국회 직책비 아들 유학비로”>

⁴ 경향신문(2017.05.25), <청와대,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 축소…문 대통령 밥 값도 자비로 계산>

- 감사원은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후 보도자료를 통해 각 기관을 독려해 통해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17.9% 줄일 예정이라고 밝힘⁵.

2. 조사취지

- 현재 2018년도 예산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특수활동비 예산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함. 다수의 정부기관이 특수활동비 감축을 표명하였고, 그 내용이 현 예산안에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예산 책정 및 집행에서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통제를 받지 않아 ‘깜깜이 예산’이라 비판을 받아온 만큼, 예산 편성이 더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불필요하게 배정된 경우가 없는지를 각 기관의 개별사업별로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특수활동비 예산을 받는 기관은 예산 전체가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비롯해 감사원,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거래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학기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국방부, 국세청,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국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이하 민주평통), 방위사업청,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등 모두 20곳임.
- 참여연대는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기재된 특수활동비 예산액과 특수활동비가 배정된 사업의 목적, 법령상 사업근거, 예산 산출근거 내용을 토대로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함.
-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의거,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국회 정보위원회 심의에 따라 예산안이 공개되지 않아 특수활동비가 사용되는 개별사업을 확인할 수 없었음.
그러나 국정원은 기관 자체의 예산 외에도 경찰청, 통일부 등 다른 정부기관의 예산에 포함된 정보예산(국회 정보위원회 심사) 편성을 기획·조정하는 권한을 수행하므로 각 기관의 개별사업 중 이에 해당하는 경우도 점검함.

* 검토자료 :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⁵ 감사원 보도자료(2017.8.29),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

1. 19개 정부기관의 연도별, 기관별 특수활동비 예산 추이

1. 2014년~2018년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연도별 추이(국정원 제외)

[표 1] 2014년~2018년 5년간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 및 증감(국정원 제외)*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7년→‘18년 증감액(비율)
감사원	3,854	3,854	3,774	3,868	3,096	▼ 772(20.0%)
경찰청	123,277	126,385	129,796	130,157	103,009	▼ 27,148(20.9%)
공정거래위	49	49	40	40	35	▼ 5(12.5%)
과학기술부	588	806	677	779	750	▼ 29(3.7%)
관세청	706	706	706	706	564	▼ 142(20.1%)
국무조정실	1,240	1,240	1,230	1,230	984	▼ 246(20.0%)
국민권익위	452	452	422	422	380	▼ 42(10.0%)
국방부	177,911	179,375	178,334	181,434	147,992	▼ 33,442(18.4%)
국세청	5,449	5,449	5,449	5,449	4,359	▼ 1,090(20.0%)
국회	8,441	8,398	7,858	8,158	6,572	▼ 1,586(19.4%)
대법원	-	300	270	320	256	▼ 64(20.0%)
대통령경호처	11,904	11,883	11,883	10,695	8,500	▼ 2,195(20.5%)
대통령비서실	14,692	14,792	14,692	12,488	9,650	▼ 2,838(22.7%)
민주평통	79	79	79	79	71	▼ 8(10.1%)

방위사업청	-	-	-	33	30	▼ 3(9.1%)
법무부	26,855	28,042	28,529	28,547	23,779	▼ 4,768(16.7%)
외교부	1,134	990	990	891	713	▼ 178(20.0%)
통일부	1,824	1,966	2,049	2,177	2,144	▼ 33(1.5%)
해양경찰청	10,639	8,450	7,787	8,128	8,762	▲ 634(7.8%)
합계	389,094	393,216	394,565	395,601	321,646	▼ 73,955(18.7%)

*예산액 기준 : 2014년~2017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18년은 각 부처 예산요구액을 기획재정부가 조정해 국회에 제출한 조정안 기준

**특수활동비를 편성받는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 대비 739억 5500만 원 감액되어 전년대비 약 18.7% 감소됨.
 - 19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18.7% 감소)
3956억 100만 원(2017년도) → 3216억 4600만 원(2018년도)
- 가장 큰 액수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된 국방부와 경찰청 또한 전년대비 각각 334억 4200만 원(18.4%), 271억 4800만 원(20.9%) 규모로 감소
 - 국방부 특수활동비 예산(18.4% 감소)
1814억 3400만 원(2017년도) → 1479억 9200만 원(2018년도)
 - 경찰청 특수활동비 예산(20.9% 감소)
1301억 5700만 원(2017년도) → 1030억 900만 원(2018년도)
- 특수활동비 예산이 책정된 19개 정부기관 중 18개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감소했지만, 해양경찰청은 전년도 대비 6억 3400만 원(7.8%) 증가함. 통일부, 과학기술부 등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감액되긴 하였으나 그 감소 비율은 전년도 대비 각각 3300만 원(1.5%), 2900만 원(3.7%)에 그침.
 - 해양경찰청 특수활동비(7.8% 증가)
81억 2800만 원(2017년도) → 87억 6200만 원(2018년도)

- 통일부 특수활동비(1.5% 감소)
21억 7700만 원(2017년도) → 21억 4400만 원(2018년도)
- 과학기술부(3.7% 감소)
7억 7900만 원(2017년도) → 7억 5000만 원(2018년도)
- 2018년도 특수활동비 전체 예산안 규모는 그동안 특수활동비 감축을 표명한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특수활동비가 증가되어 온 지난 4년의 추이를 감안한다면 의미있는 전환의 계기는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됨.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된 개별사업 분석

1. 19개 정부기관 사업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적정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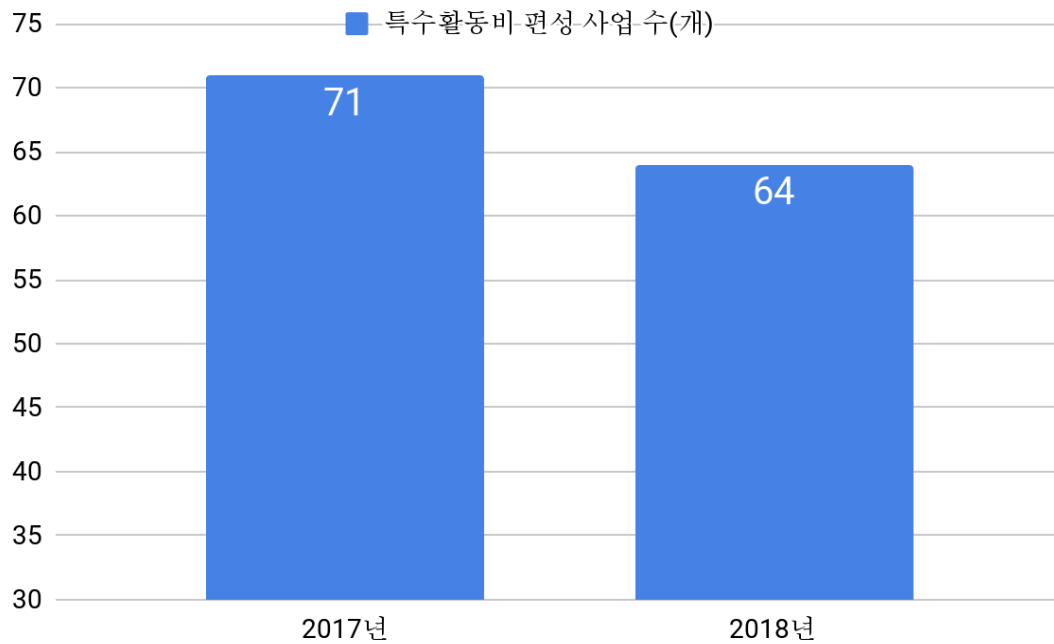
1.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판단근거

-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되는 업무의 기준은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명시되어 있음.
 - 특수활동비의 적용대상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세부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됨.
 -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계상이 금지되어 있음.
- 각 정부기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예산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가 책정되는 개별 사업의 성격이 기획재정부 지침에서 제시한 특수활동비의 적용대상, 집행목적에 부합하는가를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아래에서는 개별사업에 초점을 맞춰 정보수집 및 조사, 사건수사, 감찰 및 감사활동 등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사용되도록 특수활동비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하거나 타 비목으로 전환이 필요한 사례로 분류해 제시하고자 함.

2. 19개 정부기관의 개별사업 중 2018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 또는 타 비목으로 전환된 사업

- 2017년 예산에 따르면 특수활동비가 책정된 사업은 모두 71개 사업이었음. 그러나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은 총 64개이므로, 전년도 대비 7개 사업의 특수활동비(22억2900만 원)가 전액 삭감 또는 타 비목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그림 1], [표2] 참고).
-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 특수활동비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 18.7% 수준으로 상당히 감소된 점과 함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도 일부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임.

[그림1]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의 수 변화(2017년 예산→2018년 예산안)



[표2]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전년도 대비 전액(100%) 삭감(또는 타 비목으로 전환)된 사업

기관명	사업명	특수활동비 예산액			비고
		2017년 본예산 (백만원)	2018년 예산안 (백만원)	증감(%)	
관세청	본부 기본경비	16	예산없음	▼100	
국무조정실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소통 강화	170	예산없음	▼100	
국방부	지상방위 기본경비	80	예산없음	▼100	
	해상방위 기본경비	53	예산없음	▼100	
	항공방위 기본경비	24	예산없음	▼100	
국회	입법및정책개발	1,385	예산없음	▼100	
	의원연구단체활동	501	예산없음	▼100	
합계		2,229	예산없음	▼100	

- 그러나 아래 [그림2]와 같이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감축하거나 완전히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야하는 사업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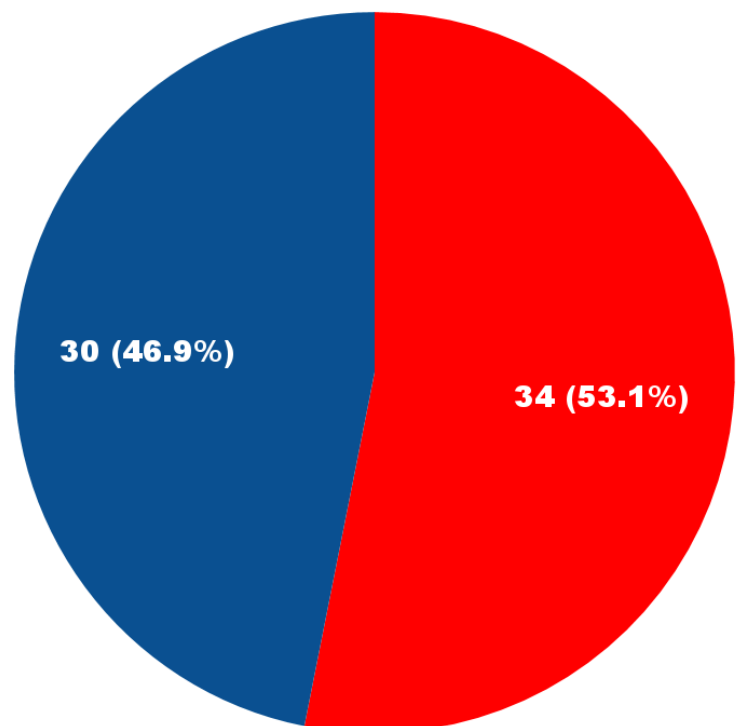
3. 19개 정부기관의 개별사업 중 특수활동비가 부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례

- 참여연대가 2018년 정부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3216억 4600만 원)가 책정된 사업 64개 중 34개 사업(294억 800만 원), 총 예산의 9.1%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특수활동비로 편성됨.

[그림2] 19개 기관의 2018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사업 중 부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의 비율

단위: 개

- 특수활동비가 부적정 편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기관 운영경비, 국정수행·입법활동 지원 등)
-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정보 및 사건수사, 감찰활동 등)



- 특수활동비가 부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관의 운영경비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경우를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었음. 참여연대가 특수활동비 부적정 편성으로 판단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표3] 참고).

- 경찰청: 1개 사업(3억 800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부적정 편성됨)
 -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3억 8000만 원)
- 국무조정실: 2개 사업(9억 8400만 원)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2억 8000만 원),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7억 400만 원)
- 국방부: 2개 사업(6000만 원)
 -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 협력(1700만 원), PKO 파병(4300만 원)
- 국회: 8개 사업(60억 9600만 원)
 - 입법지원활동(18억 5200만 원), 위원회 활동지원(15억 50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2억 3200만 원)·윤리특별위원회(7900만 원)·특별위원회(6억 6700만 원) 운영지원, 의원외교활동(5억 5300만 원), 국제회의(6300만 원), 기관운영지원(11억 원)
- 국민권익위원회: 1개 사업(3억 8000만 원)
 - 기관운영기본경비(3억 8000만 원)
- 대법원: 1개 사업(2억 5600만 원)
 - 기관운영기본경비(2억 5600만 원)
- 대통령경호처: 1개 사업(85억 원)
 -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85억 원)
- 대통령비서실: 1개 사업(96억 5000만 원)
 - 업무지원비(96억 5000만 원)
- 민주평통: 1개 사업(7100만 원)
 - 자문회의 운영(7100만 원)
- 방위사업청: 1개 사업(3000만 원)
 - 기본경비(3000만 원)
- 법무부: 14개 사업(22억 8800만 원)
 -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4900만 원),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8700만 원), 법무실 기본경비(300만 원), 인권국 기본경비(9400만 원), 외국인본부 기본경비(1억 3800만 원), 출입국 사무소 운영 기본경비(1억 3100만 원), 공소유지(1800만 원), 교정교화(10억 8600만 원), 교정본부 기본경비(2억 1100만 원), 소년원생수용(1억 1400만 원), 치료감호자수용관리(600만 원), 보호관찰활동(1억 2900만 원), 범죄예방정책국 기본경비(5000만 원), 기관운영기본경비(1억 7200만 원)

- 외교부: 1개 사업(7억 1300만 원)
- 정상 및 총리외교(7억 1300만 원)

[표3] 19개 기관의 2018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사업 중 부적정 편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의 목록

사업명 (사용처)	사업목적 / 법령상 사업 근거	특수활동비 예산액(백만원)			사업 중 특수활동비 산출근거	평가사유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증감 (%)		
기관명: 경찰청 (1개 사업)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 (경무인사 기획관)	<p>*사업목적</p> <p>- 경무인사기획관실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경찰청사 공공요금 및 청소용역 위탁경비, 경찰의날 행사 및 각종 행사경비 등)</p> <p>*법령상 근거</p> <p>-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p> <p>-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p>	475	380	▼20.0	-	경무인사기획관실의 운영경비가 기밀성을 요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활동비가 책정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근거가 부족함.
기관명: 국무조정실(2개 사업)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총무기획 관실)	<p>*사업목적</p> <p>-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p> <p>*법령상 근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p>	280	280	-	-	기관운영경비 지출이 기밀유지를 요하는 수사, 조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타 비목으로 전환 필요
국무총리 국정활동 수행 (총무기획 관실)	<p>*사업목적</p> <p>- 국무총리의 내각통할 및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p> <p>*법령상 근거</p> <p>- <헌법 제86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p>	780	704	▼9.7	-	국무총리의 공식적인 내각통할 직무가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 조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워 타 비목으로 전환 필요

	통할, <정부조직법>					
기관명: 국방부(2개 사업)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 력	*사업목적 - 국군 부대의 해외파병 활동 지원 *법령상 근거 <헌법> 제5조제1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및 연장 동의안>('16. 12월),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16. 12월)	19	17	▼10.5	-	해외파병 활동 지원에 기밀유지를 요하는 수사, 조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타 비목으로 전환 필요
PKO파병	*사업목적 - 파견한 레바논 동명부대, 남수단 한빛부대 지원 *법령상 근거 <헌법> 제5조제1항,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연장 동의안>('16. 12월),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임무단(UNMISS) 파견 동의안>('16. 12월)	48	43	▼10.4	-	해외파병 활동 지원에 기밀유지를 요하는 수사, 조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를 타 비목으로 전환 필요
기관명: 국회(8개 사업)						
입법활동지 원 (의정활동 지원)	*사업목적 - 국회의원 · 교섭단체 등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법령상 근거 <국회법>	1,552	1,852	▼19.3	교섭단체 지원	교섭단체의 활동이 기밀유지를 요하는 수사, 조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움. 타 비목으로 전환 필요
위원회활동 지원 (위원회운 영지원)	*사업목적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소관별 예결산 및 법안심사에 필요한 검토보고, 간담회 지원, 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개최, 세미나 및 인사청문회 지원	1,550	1,550	-	-	위원회의 간담회, 회의, 세미나 지원, 정부부처의 재정계획 및 성과보고서 검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지출이 기밀유지를 요하는 수사, 조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운 영지원 (위원회운 영지원)	- 부처별 중장기 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 각 부처 성과계획서 및	232	232	-	-	

영지원)	성과보고서에 대한 사전검토					타 비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윤리특별위 원회운영지 원 (위원회운 영지원)	-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한 위원회의 입법 역량 강화 제고 *법령상 사업근거 <국회법>	79	79	-	-	
특별위원영 지원 (위원회운 영지원)		667	667	-	-	
의원외교활 동 (의회외교)	*사업목적 - 외빈초청외교 : 외국 의회의장을 비롯한 의회, 정부인사의 예방 및 면담, 간담회, 산업·문화 시찰 - 의원방문외교 : 주요국 의회·정부 인사와의 면담 및 교류 *법령상 근거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직제>,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553	553	-	방문외교(51 3백만원), 외빈초청 및 의전행사(40 백만원)	국회의원의 방문외교, 외빈초청 및 의전에 기밀유지를 요하는 수사, 조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국제회의 (의회외교)	*사업목적 - 적극적인 국제회의 참석 - 각국 의회 간 입법정보의 교류 및 의견교환 - 국제회의 개최 * 법령상 근거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직제>,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63	63	-	기타 국제회의 참석(25백만 원), 기타 국제회의 개최(38백만 원)	국제회의의 참석 및 개최가 기밀유지를 요하는 수사, 조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움.
기관운영지 원 (사무처기 본경비)	-	1,100	1,100	-	-	국회 사무처의 기관운영비에 기밀유지를 요하는 수사, 조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에 편성되어야 할 특수활동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1개 사업)						
기관운영기 본경비 (운영지원 과)	*사업목적 -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집행 *법령상 근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422	380	▼10.0	-	기관의 운영기본경비 지출을 기밀유지를 요하는 수사, 조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움.
기관명: 대법원(1개 사업)						
기관운영기 본경비	*사업목적 사법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적정 경비 지급으로 직원의 근로 의욕 고취 및 대민 사법서비스 향상에 기여 *법령상 근거 <법원조직법>	320	256	▼20.0	-	기관의 조직 운영에 사용되는 기본경비에 기밀유지가 요하는 수사, 조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에 편성하는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어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관명: 대통령경호처(1개 사업)						
요인 및 국민 경호활동	*사업목적 - 대통령 및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법령상 근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0,695	8,500	▼20.5	경호활동비	대통령 및 요인 경호 업무를 특수활동비가 책정되는 수사, 조사 활동과 같은 유형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기관명: 대통령비서실(1개 사업)						
업무지원비	*사업목적 -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사업비 * 법령상 근거 <국가재정법>,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12,488	9,650	▼22.7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원활한 국정운영 수행 등 사유는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 조사 활동에 국한에 편성되어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책정할 근거로 보기

						어려움
기관명: 민주평통(1개 사업)						
자문회의 운영 (통일정책 자문국)	<p>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환경 변화와 *사업목적 - 지역별·직능별 통일여론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북·통일정책 자문건의 <p>* 산출근거: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 통일여론 수렴·분석 / 국내·해외 지역회의 / 자문회의 구성 / 자문위원 일반지원 / 간부위원 활동지원 / 직능별 정책회의</p> <p>* 법령상 근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p>	79	71	▼10.1	-	<p>정책건의, 위원회운영, 여론 수렴 및 분석, 자문회의 구성 지원, 회의 지원 등 비용이 기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조사, 수사활동 및 이에 준하는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 예산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p>
기관명: 방위사업청(1개 사업)						
기본경비	<p>*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연례 반복적인 소규모 운영경비 	33	30	▼9.1	-	<p>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및 연례 반복적인 소규모 운영경비에 특수활동비가 책정되어야 하는 근거가 부적함.</p>
기관명: 법무부(14개 사업)						
국가송무수 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법무실)	<p>*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소송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소송의 경우 정부 각 부처 지휘 - 헌법재판의 경우 정부가 당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하여 수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공익법무관을 배치,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법률복지 지원 <p>*법령상 근거</p>	61	49	▼20.0	-	<p>국가를 대상으로한 소송에서 국가를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공익법무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기밀유지를 요하는 수사, 조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에 배정되어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할 근거가 부족함.</p>

	<p><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정부법무공단법>,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공익법무관관리지침></p>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법무실)	<p>*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규범의 연구 및 국내입법 반영 - 각종 통상협상에서 타부처에 대한 법률지원 실시 및 법률서비스, 지식재산권 집행, 투자 분야 협상 직접 수행과 통상법 연구, 통상 전문 학술지('통상법률') 발간 -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구축 및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 -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이행. 국제적으로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지원, 법무협력협정 체결 등 교류, 한국법센터 지원 <p>*법령상 사업근거</p> <p><정부조직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및 시행규칙</p>	92	87	▼5.4	-	국제규범 연구, 통상협상 관련 법률지원, 법률시장 개방 대응 등 업무에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수사, 조사업무에 사용되는 특수활동비가 편성돼야 하는 근거가 부족함.
법무실 기본경비 (법무실)	<p>* 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경상적 경비 지원 <p>* 사업근거</p> <p><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p>	4	3	▼25.0	-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기밀유지를 요하는 수사, 조사에 편성되어야 하는 특수활동비가 책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인권국 기본경비 (인권국)	<p>*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국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 지원 <p>*사업근거</p>	117	94	▼19.7	-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특수활동비가 책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세출예산집행지침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	<p>*사업목적</p> <p>-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서 운영경비 및 노후 집기 교체비 등 지원</p> <p>*사업근거</p> <p>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본기능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p>	191	138	▼27.7	-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에 기밀유지를 요하는 수사, 조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에 편성되어야하는 특수활동비가 책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출입국사무 소 운영 기본경비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	<p>* 사업목적</p> <p>- 출입국 소속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p> <p>* 사업근거</p> <p>출입국관리사무소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p>	146	131	▼10.3	-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에 기밀유지를 요하는 수사, 조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에 편성되어야 하는 특수활동비가 책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공소유지 (검찰국)	<p>* 사업목적</p> <p>-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직원교육 등 인적·물적 지원</p> <p>-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실현</p> <p>* 법령상 사업근거</p> <p><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p>	18	18	-	<p>공판활동지 원</p> <p>(증거개시제 도 운영 소모품 비용, 증인구인 출장여비 등 지원, 공소유지 및 공판부 검사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비, 연구개발비 등 지원</p>	<p>운영 소모품 비용, 증인구인 출장 여비, 공판부 검사실의 활동비, 연구개발비 등 공판활동지원이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 조사에 준하는 활동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타 비목 전환 필요함.</p>
교정교화 (교정본부)	<p>* 사업목적</p> <p>- 시설 내 성폭력사범 및 마약사범 등에 대한 재범방지교육 및</p>	1,240	1,086	▼12.4	-	재범방지 교육 및 사회복귀 지원, 치료센터 등 운영이

	<p>사회복지 지원</p> <p>- 심리치료, 중독재활센터, 분류센터, 혈액투석의료센터, 교화방송센터, 위치추적관제센터 등 수용처우 전문센터 운영</p> <p>*법령상 근거</p> <p><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p>					<p>기밀성을 요하는 수사, 조사에 준하는 활동이라 보기 어려워 타 비목으로 전환이 필요함.</p>
교정본부 기본경비	<p>* 사업목적</p> <p>- 교정본부 운영에 필요 경비 지원</p> <p>- 교정기관 호송버스 등 공용차량 구입 등</p> <p>* 법령상 사업근거</p> <p><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p>	263	211	▼19.8	-	<p>교정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공용차량 구입 등이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 조사활동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움.</p>
소년원생수 용 (범죄예방 정책국)	<p>* 사업목적</p> <p>- 보호소년들을 수용, 이들에게 교과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치료재활교육 등으로 안정된 사회복지 지원</p> <p>- 위탁된 소년을 대상으로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처우지침 제공 및 재비행 방지교육</p> <p>- 자립생활관 운영</p> <p>* 법령상 사업근거</p> <p><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p>	138	114	▼17.4	<p>기타운영비(소년원생 교육훈련 및 기관운영 등을 위한 기타 운영경비)에 포함됨.</p>	<p>소년원생 교육 및 기관운영 등 활동은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 조사 활동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워 타 비목 전환이 필요함.</p>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범죄예방 정책국)	<p>* 사업목적</p> <p>-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심신장애, 마약·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및 정신성적 장애 범죄자에 대해 특수한 치료·재활교육을 실시</p> <p>-임상연구 및 선진 외국의 치료감호제도 연구</p> <p>- 검찰·법원·경찰로부터 의뢰한 자에 대한 형사정신감정</p>	6	6	-	<p>치료감호소 수용자 관리 및 시설 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p>	<p>치료료감호소 수용자 관리 및 시설운영 사업에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과 그에 준하는 사업에만 배정하여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책정한 타당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임.</p>

	* 법령상 근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활동 (범죄예방 정책국)	<p>*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 -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에게 치료명령을 실시 -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실시로 사회적 약자 등 지원강화 - 성폭력, 아동학대 등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외부강사 등을 활용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시스템 구축 <p>* 법령상 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	153	129	▼15.7	기타 계속 사업(보호관찰·수강·사회봉사명령 등 업무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음.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집행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에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 및 조사활동이 포함되어 있을지가 불확실하며,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야 할 명확한 근거가 없음.
범죄예방정책국	<p>* 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정책국 운영에 필요한 	77	50	▼35.1	-	기관 운영비에 기밀성을 요하는

기본경비 (범죄예방 정책국)	운영비 등 지원 * 법령상 사업근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수사, 조사활동에 준하는 사업에 책정되는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야하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관운영기 본경비 (기획조정 실)	* 사업목적 - 기획조정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15	172	▼20.0	-	기획조정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 조사활동에 준하는 사업에 책정되는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야하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관명: 외교부(1개 사업)						
정상 및 총리외교 (의전장실)	사업목적 *사업목적 -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ASEM 정상회의, UN총회 등 다자정상회의 및 국제회의 참가와 양자 방문 - 총리의 다자회의 참가 및 양자 방문 - 우리 정부의 공식초청 및 상대국 정부의 공식 방한요청에 의한 외국 국가원수, 총리 등 외빈영접 관련 의전행사 수행 * 법령상 근거 <헌법>	891	713	▼20.0	-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 국무총리의 다자회의 참가 및 방문, 국빈영접 등 의전행사가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수사, 조사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 예산은 타 비목으로 전환이 필요함.

2.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기획·편성한 정보예산으로 확인된 경우

1. 2018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 중 국정원이 기획·편성하는 정보예산(국회 정보위원회 심사)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

-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4조 제5호에 따라 국정원장은 국정원 외 타 부처에도 정보예산을 기획·조정할 수 있음⁶. 해당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별도 심의하는 예산임.
-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일부 사업의 특수활동비는 법령상 사업근거로 <국가정보원법>,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이 기재되어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예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국정원이 기획·조정하는 정보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사업은 4개이며 이들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1905억 6500만 원에 이릅니다(19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총액의 약 59% 수준)
 -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가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내용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법령상 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특수활동비도 다수 있었으므로 19개 기관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관여하는 금액은 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⁷.
- 정보예산으로 확인된 특수활동비의 전년대비 감소율은 -15.7% 수준으로 다른 사업의 특수활동비에 비해 삭감된 폭이 상대적으로 낮음. 그 낮은 감소율도 대부분 국방부의 군사정보활동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331억 6500만 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18.3% 감축된 것에 기인함.

경찰청의 치안정보활동, 통일부의 통일정책추진활동, 해양경찰청의 기획특수활동 사업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각각 -8.5%, -1.5%, -8.1%로 한자리 수 이하의 감소율을 보임.

⁶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정보예산의 편성

⁷ 지난 2015년 9월에 박남춘 국회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 해에 ‘국정원의 통제를 받는 정보비’는 875억 9200만 원으로 전체 경찰청 특수활동비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음. 반면 본 보고서에서 정보예산으로 명확히 확인해 기재한 경찰청 특수활동비는 322억 6200만 원이므로, 확인되지 않은 특수활동비 예산 중 정보예산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음.

박남춘 국회의원 보도자료(2015.9.4), <경찰,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2년간 253건, 카드깡도 적발 징계는 거의 안 해 ‘숨방망이’> 참고.

- 국정원이 관여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이 타 기관에 편성되어 있을 경우,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한 내부통제 등 관리·감독이 어렵고, 국회의 예산 통제와 관련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예산을 감시하기 어려워지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음.

[표4]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도 예산 중 국정원이 기획·편성한 정보예산으로 확인된 특수활동비가 포함된 사업

사업명 (사용처)	사업목적 / 법령상 사업 근거	특수활동비 예산액(백만원)			사업 중 특수활동비 산출근거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증감 (%)	
기관명: 경찰청(1개 사업)					
치안정보 활동 (정보국)	<p>*사업목적</p> <p>- 치안정보 수집, 분석, 전파로 각 분야의 다양한 사회갈등 요인 조기해결 및 법질서 확립</p> <p>- 테러, 안보위해, 국민안전, 재해재난 등 치안정보 수집·분석 역량제고</p> <p>- 노후 채증장비 교체 등 정보장비 현대화 및 치안정보 관리기반 지속적 확충</p> <p>- 국가안보, 사회 안정 저해요인 제거를 위한 신원조사 역량 강화</p> <p>*법령상 근거</p> <p><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정원법>, <여권법>, <보안업무규정> 등</p>	35,272	32,262	▼8.5	-
기관명: 국방부(1개 사업)					
군사정보 활동	<p>*사업목적</p> <p>- 군사정보의 수집, 분석, 판단 및 생산</p> <p>*법령상 근거 및 추진경위</p> <p><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 3조에 따른 군 정보사업 추진</p>	180,835	147,670	▼18.3	군사정보비 - 군사정보의 수집, 분석, 판단 및 생산 활동에 필요한 경비

기관명: 통일부(1개 사업)					
통일정책 추진활동 (기관운영)	* 사업목적 - 대북협상력 제고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 법령상 근거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	2,177	2,144	▼1.5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별도 심의
기관명: 해양경찰청(1개 사업)					
기획특수 활동 (기획조정관) ⁸	* 사업목적: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법령상 근거 <국가정보원법> 제3조	7,855	8,489	▲8.1	-

⁸ 해양경찰청의 기획특수활동비도 세부사업 코드번호가 “230-00”으로 특수활동비와 동일하므로 특수활동비에 해당함.

1. 불필요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 여전히 많아

-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받는 19개 정부기관(국정원 제외)의 특수활동비 편성 총액은 전년도 대비 18.7% 감소해,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줄여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비록 전년도 대비 특수활동비가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사업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여전히 불필요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이 적지 않음.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 및 수사활동과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한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그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사업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음.
- 2018년 예산안에서 전체 특수활동비(3216억 4600만 원)가 편성된 사업은 모두 64개인데, 이중 34개 사업의 특수활동비(294억 800만 원)는 특수활동비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그 사업목적 상 특수활동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특수활동비가 포함된 사업의 사례로는 기관의 기본 운영경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지원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및 외교활동·국제회의 등 지원, 법무부의 국가 소송대리업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공소유지, 소년원·치료감호자 수용 및 보호관찰, 외교부의 정상 및 총리외교 수행 등이 있었음.

2. 관리·감독받지 않는 특수활동비, 더 줄여야

- 참여연대가 지난 6월부터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수립 여부>, <자체감사 진행 및 증빙서류 제출 현황>을 등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구체적인 자체 지침·집행계획을 수립·공개한 기관은 5곳에 불과했고,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를 한번도 진행하지 않은 기관이 최소 8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됨.
- 특수활동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산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 편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3. 가장 불투명한 예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개혁도 필요

- 국정원 예산은 비공개로 국회 정보위원회에만 제출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 국정원의 전 예산은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며, 총액으로 계상되어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증받지 않는데, 운영비나 인건비 등은 정보수집을 위한 활동비와 분리해 편성하는 방안도 예산 집행의 관리·감독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국정원이 아닌 다른 정부기관의 예산으로 계상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국정원이 관여하는 정보예산의 존재는 그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과 함께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예산을 받은 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당 예산이 편성된 기관으로 완전히 편입시키거나 대폭 줄이는 등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발행일 2017. 11. 20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장유식 변호사)

담당 신동화 간사 02-723-5302 hwa@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